

광주 최대 규모 광천동 재개발 본격화되나

법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낸 사업 시행 계획 무효 소송 기각 조합측 연내 관리처분 인가 뒤 내년말 이주... 2022년 착공 추진

광주시 서구가 인가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격도에 오를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방송 등 21명은 지난해 8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무효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데, 개정 규정의 취지가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등으로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주택,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외 건축물도

만드시 포함해 건설·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위배되고 재산권 본질을 침해한다는 광주방송 등 토지소유자들의 주장도 "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이익의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이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법원 결정으로 사업 본격화에 호재를 맞았다고 반기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8년 가까이 노후화된 주거

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탄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항소심·상고심 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합측은 그러나 1심 판결을 계기로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낸 뒤 내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 이듬해 본격 착공하는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예산만 1조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42만 5984㎡ 부지에 5611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53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격도에 오를 지 주목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예정인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재판부 변경에도...광주 못온다는 전두환

오늘 공판준비기일 인정신문 출석해야 재판부 판단 주목

열릴 재판 출석과 관련,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인정신문을 다시 한다면 재판을 새로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씨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했다더라 인정신문을 하는 것

공판과 선고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전씨측은 그러나 새롭게 재판을 시작한 게 아니고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취지를 고려하면 전씨임을 알 수 있는 만큼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6일 열리는 전씨 재판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 때 전씨 출석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전씨의 출석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법은 6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총선 출마로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뒤 열리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단속 도주자 쫓아? 말아?

광주서 도주 20대 추락 사망 경찰, 추격범위 등 놓고 고심

경찰이 음주 운전자 추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경찰 부상·사고 등을 우려해 무리한 추격 금지를 권하고 있지만 자칫 음주운전자 추격을 포기하는데 따라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빚어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사고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음주 단속 현장 전·후방에 순찰 차량을 배치하고 도주 차량이나 사고 발생 시 대비하고 있지만 순찰차 운전자가 단속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도주 차량 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음주 단속에 따른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27)씨는 "S"자형 단속 현장 30m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 금당산과 풍암초교 사이길로 도주하다 경찰차 추격을 피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이길 옆 9m 옹벽을 따라 설치된 가드레일을 뛰어넘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현장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A씨가 옹벽 높이를 모르고 아파트만 보고 뛰어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경찰은 '음주 단속시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 금지를 권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잇따라 부상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음주 운전자 추격을 포기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빚어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사고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음주 단속 현장 전·후방에 순찰 차량을 배치하고 도주 차량이나 사고 발생 시 대비하고 있지만 순찰차 운전자가 단속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도주 차량 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음주 단속에 따른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차량을 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며 "경찰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격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승진 심사위원들에 부탁 문자 보낸 소방관 4명 징계 적법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 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 소방본부 산하 14개 소방서 서무담당자들은 승진심사일에 일정에 없던 출장을 가는 직원은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 이를 명단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

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품목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소방관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고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내 등에 침 뱉은 남성 잡아달라"... CCTV로 확인 안돼 '난감'

○...경찰이 자신의 등 뒤에 침 뱉은 남성을 잡아달라는 20대 여성의 신고로 CCTV를 뒤졌지만, 누가 침 뱉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27)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횡단보도에서 대기중 자신의 뒤쪽에 서있던 남성의 침을 뱉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웃을 확인해 보니 침이 묻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해당 횡단보도 인근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침을 뱉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지만 침이 날아가는 방향을 특정할 수 없고 A씨 옷에 묻은 침이 남성이 뱉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을 들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토로.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 | | | | | |
|-------------------------|-------------------------|-------------------------|--------------------------|-------------------------|-------------------------|
|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침단지점 576-4150 |
|-------------------------|-------------------------|-------------------------|--------------------------|-------------------------|-------------------------|